문화전당 개관도 하기전에…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무력화 시도

행자부 직제개편안, 추진단 폐지하고 위탁 운영 내용 담아

새정치 "국민과 함께 저지 투쟁"…지역 정치권 강력 항의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폐지(아문단)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무력화하는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서구갑)이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아문단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아문단 인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원으로 활용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 소관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행 '아특법' 제30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에 아문단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대통령령 제19조에 아문단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총괄, 문화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 7대 문화권 조성, 문화전당 운영계획 수립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이 명백하게 상위법인 아특법에 규정된 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개정령안에 따른 문화전당 직제 편성을 보면, 수익성이 없어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부분까지 거의 대부분을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아특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아특법'제27조 제4항에는 문화전당 운영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관도 하지 않은 국가소속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소속기관들은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 객관적 평가 등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개정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빈약한 의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이 같은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개정령안 저지를 당론으로 삼을 예정이며 29일 광주 국회의원들은 행자부 장관을 만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문화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갖고 정부의 개정령안 취소를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박혜자 의원 등은 아특법을 공동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개정령안 폐지 압박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특법은 지난 2006년 9월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올해 3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한 '개정안'이 1년 6개월간의 공방 끝에 통과된 바 있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개정령을 통해 상위법인 아특법을 무력화시킨다면 이는 국민과 법률, 국회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령을 거둬들일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예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소 인력으로 문화전당의 조직을 구성하고, 문화전당 업무를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는 방식의 운영 방침을 드러냈다"며 "문화전당은 무늬만 국가기관이지, 사실상 법인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우려했다.

전당 조직에 대해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해 문화부의 한 과(課)로 편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문화전당을 제외한 조성사업의 나머지 역점 과제의 진척이 더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6·25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25일 강원 화천군 최전방인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댐에서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6·25전쟁 상기 행사'가 열렸다. 참석 인사들이 비목탑에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경제살리기 역행?

지역정치권, 박대통령 발언 강력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설명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하 아특법)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 지역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 난감하다"라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안 처리를 못한 경우를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한 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등은 강력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 파악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아특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아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연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아특법이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12월17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정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단 하루 만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법' 운운하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아특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처리의 예로 들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예산이 마치 '국민세금만 축내는 예산'인 냥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메르스 178번 환자, 발열전 전남 체류

부친 장례…전염 가능성 낮아

지난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78번 확진 환자로 발표된 A(29)씨가 메르스 증상을 보이기 이틀전까지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전남의 한 군에 체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머무르는 동안 접촉했던 사람들은 현재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전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29일 평택성모병원 7층 병동에 입원했다가 평택박애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6일까지 있었던 아버지(62)를 병간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지난 6일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을 찾아 14일 오전까지 머물렀다. A씨는 아버지 시신 화장을 위해 지난 8일 다른 지자체 화장장을 일시 찾기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전남을 떠나 평택 집으로 귀가했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발열증세를 보였고 24일 확진환자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 메르스비상대책단은 장례식장 조문객(217명) 등 A씨와 접촉한 238명을 확인한 결과, 메르스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종섭·홍용표 장관 전남 방문

정종섭 장관

홍용표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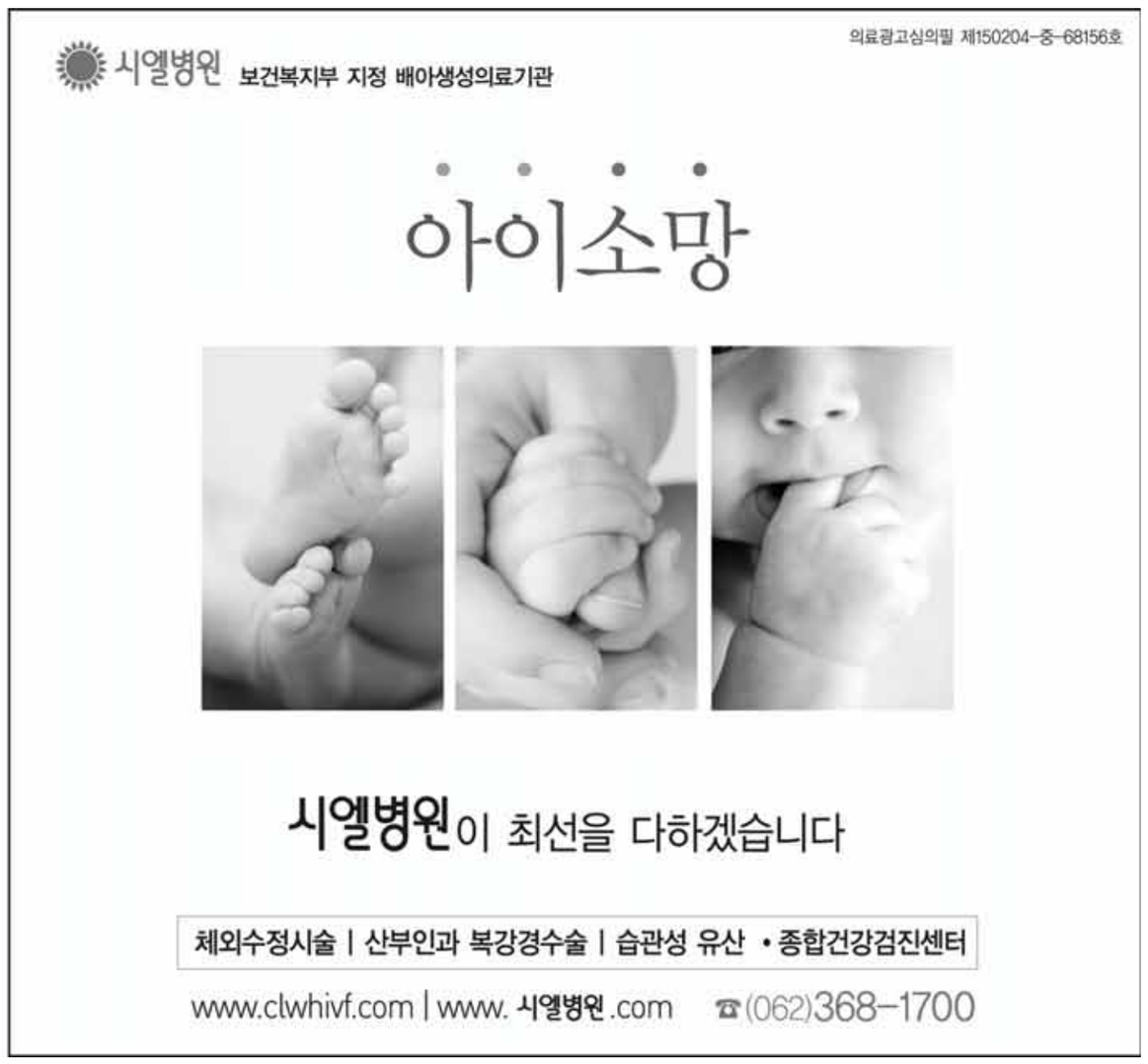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26일 각각 전남을 방문한다. 정 장관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격리됐다가 최근 해제된 보성의 한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탈북 주민들을 위한 여수의 하나센터 지소를 찾아 탈북자들을 격려한다. /윤현석기자chadol@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단 제주서 회의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지방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회장 송광석) 편집국장단은 25일과 26일 이틀간 제주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사업·기획 등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오후 제주 칼(KAL)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훈 매일신문, 장철순 경인일보, 김명현 경남신문, 오한진 대전일보, 김승종 제주일보, 황형주 강원일보, 정후식 광주일보 편집국장.

한신협 편집국장단은 25일 오후 제주 KAL호텔 2층 다이너스티룸에서 회의를 갖고 종편채널 TV조선과의 '대한민국 관광을 살리자' 공동사업 건을 비롯해 지역별 관광·레저 기사 공동 게재의 건, 지역언론발전특별법의 시효 만료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한신협 편집국장단은 채널A와의 제휴 관계 정립과 올해 하반기 금요칼럼의 필진 구성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한신협은 광주일보와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시·도를 대표하는 신문사로 구성돼 있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